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94호
2019. 1. 28

정책동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과 과제
-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 무엇을 담고 있나

시장동향

- 공모 리츠, 수익률 높은데 개인 투자 참여는 저조

산업정보

- 영미권의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동향과 한계점

연구원소식

건설논단

- 건설경기 살려야 지역경제 활력 높아진다

社告

설 연휴인 2월 4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과 과제

- 실효성 제고 위한 국가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 조치 이뤄져야 -

싱크홀 계기로 도입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년 1월부터 시행

- 지하공간 개발사업의 사전·사후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하안전법)」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 제도, 지하공간 통합 지도 제작, 기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 정보 체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법에 따라 굴착 깊이 10m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는 지하개발 사업자(시공사)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 이후에도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함(<표 1> 참조).

<표 1> 「지하안전법」에 따른 주요 지하 개발 및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지하 안전 점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근거	특별법 제14조	특별법 제23조	특별법 제20조	특별법 제34조	특별법 제35조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굴착 깊이 10m 이상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시기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매년 정기적 점검	지반침하 우려시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 관리자	전문기관
협의 및 제출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지하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가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 시·도와 시·군·구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지자체들도 지하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 중임.
-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실태 점검, 중점관리시설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 대전시도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가평군도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음.

■ 「지하안전법」 시행 1년,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 지난 1월 16일 한국지하안전협회 주최로 열린 ‘지하안전관리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방향이 논의됐음.
- 토론회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점검 시행 주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음.
 - 상·하수도과 같이 다수의 행정 구역에 걸쳐 매설되는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안전 점검 시행 주체 또한 다수에 해당되어 안전 점검 및 평가 주체를 시·군·구보다 상위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업무가 국토교통부(평가·승인)와 지자체(이행 여부 확인)에 이원화되어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통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굴착 깊이 10m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굴착 깊이 10m 이내의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피하기 위한 굴착 깊이 허위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 낭비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서울시는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사건을 계기로 지난 17일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 대상을 굴착 깊이 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음.
- 그 밖에 지하안전 평가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지하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 등이 논의됨.

■ 국가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 조치 필요

- 「지하안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국 지하공간 통합 지도’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사업, GTX 등 지하 시설물의 개발 수요 증가로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안전법」의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시행 초기에 나타난 비효율인 요소를 개선하고 국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를 연계한 긴밀한 지하시설물 안전 체계 구축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 무엇을 담고 있나

- 맞춤형 컨설팅 확대, 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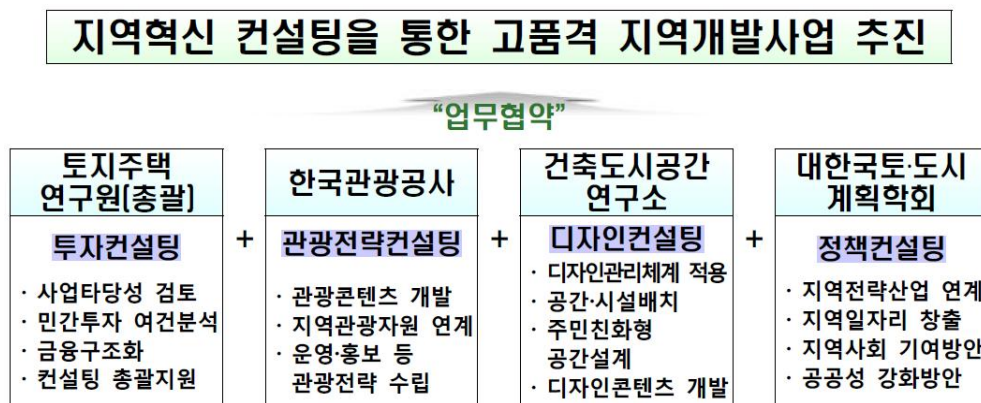
정부,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을 위한 포괄적 정책 지원 방안 발표

- 지난 1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함.
 - 이번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은 ① 지역혁신 컨설팅, ②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③ 지역사업 성과 평가로 이루어짐.
 - 정부는 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 및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계획함.

지역혁신 컨설팅 확대로 지속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혁신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 컨설팅 및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지역 개발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인 지역 중심 발전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험 축적과 역량 제고가 필요함.
 - 이에 지역 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함.
 - 지자체 수요, 협약기관 검토 등을 통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 및 사업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사업별 자문단(4~5명)을 매칭할 계획임(<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혁신 컨설팅 추진 방안



자료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디자인관리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시범사업 지원

- 개발사업 디자인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디자인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전문가 추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선도 사례를 창출할 계획임.
- 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 거점,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핵심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위한 디자인관리가 매우 중요함.
-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 올해 12월에는 지역개발 디자인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할 계획임.

■ 지역개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혜택 부여하고 홍보도 적극 추진

- 지역 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연계함. 특히,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혜택을 줄 계획임.
- 지역 개발사업 성과 평가는 지역 개발사업의 파급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 사업 선정 및 확산을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범 도입됐음.
- 지역개발 성과 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소통과 역량 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올해부터는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지역 정책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3~5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임.

■ 장기적 지원과 관심으로 지역 개발사업의 성과 높여야

- 정부는 지역 주도형 발전 계획을 장기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지역발전 투자협약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약을 통해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어 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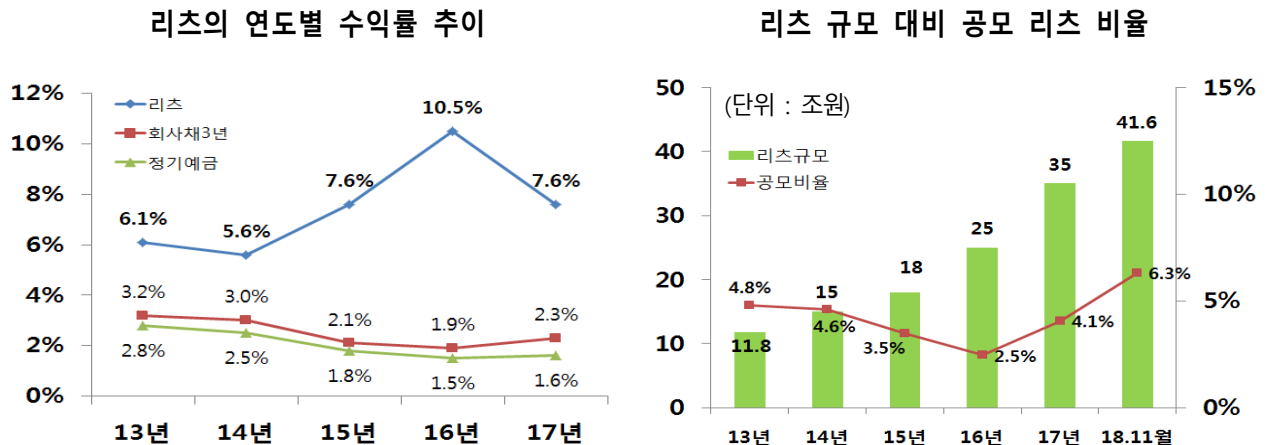
공모 리츠, 수익률 높은데 개인 투자 참여는 저조

- 정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 참여 유인 -

리츠¹⁾, 양호한 투자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참여는 매우 저조

- 리츠 투자의 수익률은 연 5% 이상으로 타 금융상품 대비 현저히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함.
 - 2017년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7.59%로 회사채(2.33%) 및 예금 금리(1.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리츠 투자의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리츠의 주요 투자자는 연기금 위주의 기관투자자임.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부동산 리츠 중 일반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그치고 있음(2008년 11월 기준).

<그림 1> 공모 리츠 비율 및 연도별 수익률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고수익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 참여 유인

- 리츠 투자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와 주택 투자에 대한 시중 유동자금의 수요 감소를 위해 정부는 리츠 상장 규정 정비와 개인 투자자의 리츠 접근성 확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2018. 12. 19).

1) 지난 2001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및 급락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됨.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빌딩·상가·백화점·호텔 등의 부동산을 매입·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뜻함.

- 리츠 상장 규정 정비 방안에는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 제한, 공모·상장 규제 개선, 비개발 위탁 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폐지 등이 포함됨.
- 더불어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주택도시자금 내 여유 자금의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 투자자의 리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됨.
-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방안과 함께 리츠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츠 신용등급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결정함.

■ 수익률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개인 투자자 관심 유도 필요

- 앞서 발표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를 위한 상장 요건 완화 및 리츠 투자 상품의 확대 등 공모 리츠의 공급 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공모 리츠의 공급 확대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만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모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항인 거래의 용이성을 높이고, 수수료 체계와 배당 시기 및 예상 배당률과 함께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함.
- 리츠는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임. 아래의 <표 1>과 같이 임대주택을 포함한 2017년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3.82%였으나 임대주택을 제하면 7.59%로서 임대주택의 포함 여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상이함.

<표 1> 임대주택 포함 여부에 따른 리츠의 배당 수익률

(단위 : %)

배당 수익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수익률	임대주택 제외	5.13	6.06	5.63	7.62	10.55	7.59
	임대주택 포함	5.13	5.98	5.00	5.87	6.59	3.82

자료 : 리츠정보시스템

- 부동산 공모 펀드는 3~5년간 폐쇄형이 대부분으로 펀드 투자시 투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부동산 공모 리츠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용이성이 큼.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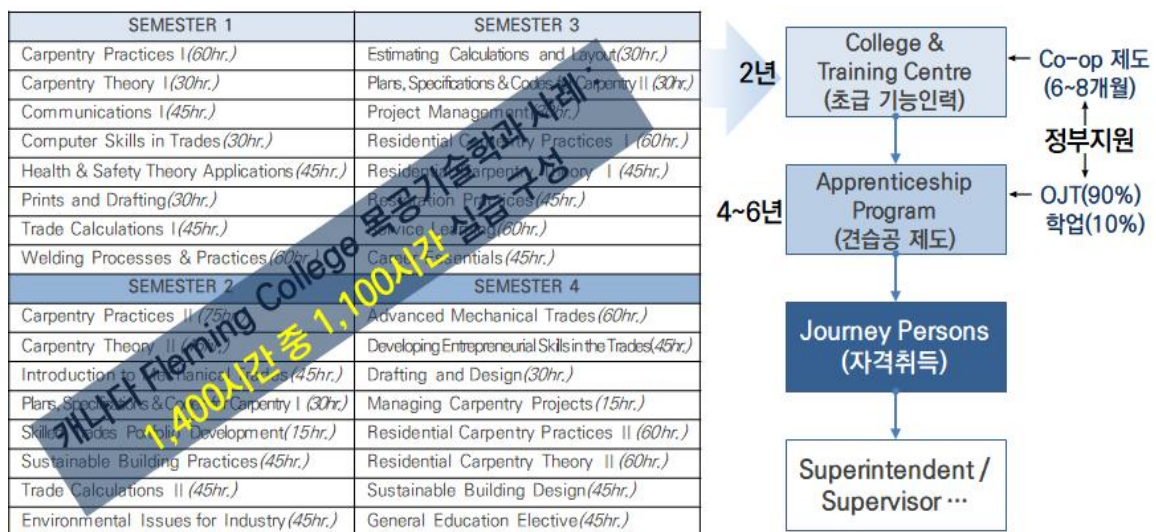
영미권의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건설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경력·자격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

■ 영미권 국가, 건설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경력·자격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은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임.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현장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영미권 국가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건설 기능인력 육성 정책을 추진해 건설 기능인력과 관련된 제도, 교육훈련 체계, 경력관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인력과 기술자의 상호 연동성 강화, 자격 제도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능인력의 전(全)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음.
-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단순 직업훈련 차원의 초급 기능인력 양성 체계에서 탈피해 현업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와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구축하고 있음.
 - 일례로 캐나다 Fleming College의 경우 건설 기능인력 교육시 대부분의 시간을 실습에 할애하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가 자격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림1> 영미권 국가의 건설 기능인력 자격 취득 절차 및 전문대학 교육 커리큘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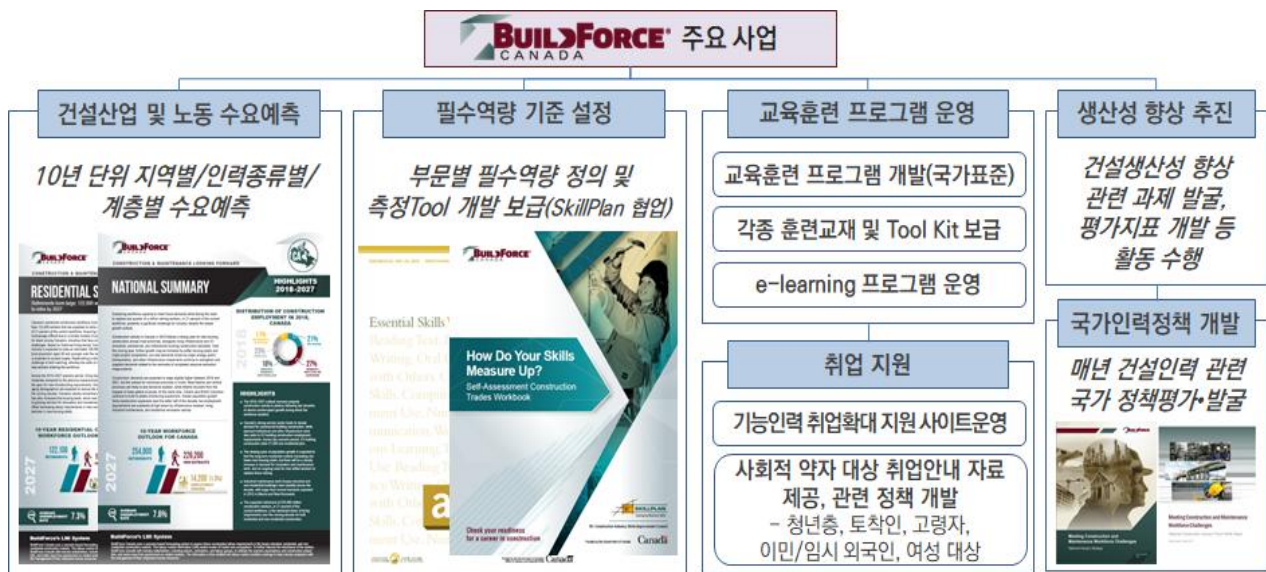
자료 : 캐나다 Fleming College.

- 특히, 캐나다의 경우 노사정(勞使政) 협업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건설 기능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BuildForce Canada’ 라는 비영리 민간기관을 설립함.

- ‘BuildForce Canada’ 는 기능인력 관련 종합 정책을 발굴해 전파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예산 모두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 지원으로 2001년 건설부문위원회(Construction Sector Council)가 설립되어 2013년에 ‘BuildForce Canada’ 로 개명함.
- 이사회는 4명의 건설사(民), 4명의 건설 노동조합(勞), 4명의 공공 발주자(官)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2> BuildForce Canada의 주요 사업



자료 : BuildForce Canada.

■ 우리나라도 건설 기능인력의 전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프로그램 구축 필요해

-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도 최근 건설 경력관리 시스템(Career up System) 도입을 통해 건설 기능인력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들의 경력을 관리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에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시스템, 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건설업이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 기능인력의 전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프로그램(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 구축이 필요함.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동향과 한계점

- 현장 실무 능력 중심 제도로 변화 중이나 빠른 기술 변화 대응에는 한계 -

■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체계

-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가 제도의 총괄 운영과 자격자의 배출을 담당하고, 19개 부처·청·위원회에서 소관 종목을 관리하는 체계임.
 -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총 530종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이며, 이 중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117종목을 관리하고 있음.
 - 산업 분야별 기술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1963년) 건설 분야에서 배출된 기술사는 전체 기술사의 61.8%(3만 4명) 수준이며, 등록자 수로는 77.3%(2만 6,144명)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산업에서는 PQ심사,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 업체 설립 등록기준 등에 국가기술자격과 건설기술자 등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는 건설인력의 배출 및 양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 능력 중심에서 현장 중심 자격으로 변화

-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²⁾을 심의·확정하였으며, 이번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 능력과 현장 중심의 자격 제도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시험 통과 방식인 ‘검정형 자격’의 운영을 축소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장 경력을 통해 습득한 직무 능력을 인정하는 ‘경력평가형 자격’의 도입을 추진함.
 -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8년 총 111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개설되어 있음. 건설 분야에서는 조경기사, 용접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등이 해당됨.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구축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이며, 이번 기본계획도 NCS 기반의 개편을 전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우선 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 과목을 재검토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을 추진

2) 고용노동부(2018. 11. 23),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할 계획임.³⁾

- NCS 활용 실태 및 애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 양성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제4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⁴⁾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급 엔지니어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음.
 -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위축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 중이나, 국제 통용성과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기술자 부족이 지적되었음.
 - 기술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로는 기술사를 최고 수준의 공학자로 육성하기보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최고 자격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하고 직무를 개발해야 하는 기술사들이 실무는 기술보조자에게 맡기고 사업 수주 등 관리 업무에 치중해야 하는 분위기가 지적되었음.
- 이에 엔지니어의 '배출', '육성·관리', '활용'의 3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국제 통용성 확보와 기술사의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되었음.

■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 가져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은 많은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변화가 어렵고, 신기술 및 신산업의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어 건설산업계 및 건설 교육·훈련 관련 니즈가 적시에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인력의 역량을 평가하는 만능 키로 사용하기보다 각 기술자의 현장 경험과 직무 역량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자격, 학력, 경력을 종합평가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해 왔으며, 이번 국가기술자격 기본계획에서 현장 경력 인정에 관한 사례로 제시되었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도 학경력자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2018.10)하는 등, 이러한 최근 움직임들은 자격보다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중시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3) 융·복합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NCS 능력 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3. 13), 제4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국토교통부	• 국토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규제심사에 주택도시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1.18	국토교통부	• 건설 업종 개편 TF회의에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 참여
1.24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인프라금융연구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참석
1.29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4차 분과위원회에 미래기술전략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 이슈포커스	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의 스마트홈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스마트홈을 주택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으로 여겨, 거주자들의 삶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홈 사업은 파이프라인 산업 관점에 머물러 있음. 구체적으로 건설산업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정보통신업체는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가전회사는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스마트홈을 새로운 마케팅 브랜드로만 소비할 뿐, 실제 스마트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음. - 주택에 접목되는 스마트홈 기기들은 거주자들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스마트홈의 개발 방향도 편의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고 있음. 스마트홈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O2O 방식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체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스마트홈을 상거래가 발생하는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거주자들을 고객 네트워크로 편입시키고, 소평·건강·의료·교육 등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 공급자들을 공급자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스마트홈에 연계함으로써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음. - 플랫폼 사업 관점에서 스마트홈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홈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주택 공급자, 정보통신회사, 가전회사 등)들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사업을 유지한 채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스마트홈의 플랫폼 사업은 관련되는 각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수익 공유 체계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으며, 기술과 서비스, 플랫폼의 융합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스마트홈에는 기존의 다른 플랫폼 사업과 달리 다수의 고객 네트워크와 공급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 운영 주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통합하고 조직할 주체가 필요함. - 각 주체별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지고 사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위와 리더십을 가진 주체에 의한 통합적인 플랫폼 구축 작업이 필요함. -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플랫폼화된 스마트홈은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등의 모든 주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거대 시장임. 따라서 융합의 관점에서 각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고 수익 공유 방식을 정하고 표준적인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함.

건설경기 살려야 지역경제 활력 높아진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2.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 소비 부진과 고용 여건 악화 등 실물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국내 경제 상황 때문이다. 대외 경제 여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갈등 심화와 유럽 주요국들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목표치 32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폭 줄어든 목표치 자체가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 조사를 보면, 기업인 10명 중 8명이 2019년 지역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 경남, 광주 등 광역 지자체들은 물론,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 등 기초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최근 핵심 정책 키워드로 지역경제 회생을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한결같이 지역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제조업을 비롯한 전략 산업들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있지 않다.

지역경제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다. 최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민간 건설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의 지역 내 생산 및 고용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등 지역들과 대구, 부산, 경북, 충남 등 민간 주택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전반에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은 지역 내에서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많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삼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들마다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브릿지경제, 2019.1.3>

김영덕(연구본부장 · ydkim@cerik.re.kr)